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2면
조국혁신당 창당 1주년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음 2월 5일) 제369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이제 국제무대로… 전북, 올림픽 유치 경쟁 본격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도시 선정

➔ 관련기사 3면 · 5면 · 6면 · 16면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서 총 61표 중 49표 얻어
김관영 도지사 "도민들의 열정이 이뤄낸 성취
전북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가는 큰 길 열 것"

전북이 막강한 서울을 제치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에 단독 선정되는 쾌거를 통해 2036 전북 올림픽을 향한 대망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김종훈 경제부지사, 최병관 행정부지사,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유인탁 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등 30여 명과 함께 지난 1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2036년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유치 후보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전북은 지난 2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진행된 국내 후보지 선정 투표에서 총 61표 중 49표를 얻어 11표를 얻은 서울을 큰 표차로 제치고 승리를 거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성공했습니다"라며 "이 결과는 도민들의 도전 정신과 헌신, 열정이 이루어낸 당당한 성취이자 빛나는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올림픽 유치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늦은 출발에 대한 우려, 강력한 경쟁 상대에 대한 걱정, 인프라 부족과 재정 논란 등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며 "하지만 도민 여러분이 '전북도 할 수 있다'며 믿어주셨고, 그 의지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유치에 대한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도민 지지율이 8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 지사는 "초반에는 낮았던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고, 이는 도민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이번 유치 성공을 계기로 "전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전북을 지지해 주신 체육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도·시 군의회 의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올림픽 유치를 향한 여정에서 모든 분이 큰 힘이 되어 주셨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국제 무대라는 더 큰 도전에 나선다"며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속히 꾸리고, 정부와 협력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전북이 앞장서 대한민국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가는 큰길을 열겠다"며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과로 전북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 향후 인도,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 10여 개국 나라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이 국제 무대에서도 기적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번에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성공으로 인해 김 지사의 2026년 재선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김 지사를 정점으로 전 도민이 똘똘 뭉쳐 전북발전의 전기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도민은 "김관영 지사의 불도저 같은 추진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며, "김 지사의 도전경성이 이번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라는 큰 성과를 만들어 낸 만큼 전 도민이 힘을 합해 이번 기회에 똘똘 뭉쳐 체육팀도 많이 만들고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기반 시설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다른 한 도민은 "40만의 작은 도시인 마국 애틀란타시가 1996년 올림픽대회를 개최한 후 20%씩 성장한 예를 들며 전주만 해도 이보다 더 큰 60만이 넘는 도시이니만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2036 올림픽 대회 개최 도시 선정으로 인한 사회간접 자본 투자 등 전북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만호 기자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에 김관영 도지사와 호남 유일 생존 이석규 애국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더 나은 전북 위해 나아가겠다'

전북자치도, 3 · 1절 기념행사 개최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훈 · 포장 전수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지난 1일 오전 10시 도청 공연장 3층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도내외 주요인사, 국군장병, 학생 등 900여 명이 참석해 3·1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 앞서 진행된 식전 공연에서는 플루티스트 윤수연이 전북아리랑을 비롯해 아름다운 나라 등을 연주하며 플룻의 맑고 청아한 선율로 기념식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다.

이어,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격려, 독립선언문 낭독, 독립유공자 훈·포장 전수,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독립운동가로 호남 지역 유일 생존자인 이석규 애국지사를 직접 휠체어로 행사장으로 모셔다가 앉힌 후 이 애국지사 목에 꽃목걸이를 전달하며 독립운동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독립운동가 故 김재천, 故 이내용 애국지사 후손에게 건국포장, 故 윤선호 애국지사의 후손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해 도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는 전북도립국악원의 '유관순 열사가' 공연과 군산푸른소리합창단의 '1919 만세소리' 합창이 이어져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의 만세삼창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은 언제나 저항의 한복판에 있었으며, 군산 3·5만세운동은 한강 이남 최초의 독립운동이었다"면서 "임시정부 수립, 8.15광복, 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에 이르는 우리 근현대사는 국민들의 힘으로 일으킨 기적과도 같은 역사였다"고 말했다.

또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이 없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다"면서, "애국선열들의 희생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더 나은 전북,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06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기념식 이후에는 전북지역 독립운동 추념탑에서 참배 행사를 진행하여 순국선열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만호 기자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도, '2025년 등록규제' 208건 공개

15건 규제 제외 · 3건 신규 추가… 규제 실효성 높이는 데 중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2025년 등록규제' 208건을 지난달 28일 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는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등록규제'는 조례·규칙 등을 통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공표를 통해 도민들에게 규제 현황을 알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규제 목록을 정리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올해 공표된 등록규제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지난해 조례 제·개정 반영, 상위법 위임사항 등을 점검한 후 반영된 총 208건으로 지난해(220건) 대비 12건이 줄어들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함으로써 규제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한 결과다.

특히, 올해 등록규제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수련시설 이용신청과 이용료 반환을 규정한 2건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건폐율 완화 적용 조항 등 총 3건이 신규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을 단순히 재규정한 조례를 비규제로 정정하는 등 총 15건의 규제를 제외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도민이 겪는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절차를 간소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등록규제 목록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등록규제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민들은 이를 통해 규제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